

북한의 경제개혁조치 실시배경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1. 경제개혁조치의 주요내용

북한은 최근 물가 및 임금을 인상하고, 사회보장 정책을 축소하는 등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쌀 구매가격을 kg당 80전에서 40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판매가격을 8전에서 44원으로 인상하였다. 즉 배급제는 유지하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종전의 高價收買·低價販賣 정책을 포기하고 低價收買·高價販賣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북한은 물가가 인상됨에 따른 노동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임금 인상 조치도 취하였다. 생산직의 임금을 월 11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피 직종인 채탄부의 경우에는 임금을 6,000원까지 인상하였다. 또한 기업이 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소속 노동자에게 업적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으며, 생산효과가 미미한 남포유리공장을 비롯한 다수의 공장을 폐쇄하는 등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도 취하였다.

한편 북한은 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사회보험제 등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일부 사회보장제도는 유지하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택임차료를 징수하고, 수도·전기료를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일부 공공요금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도입하였다.

북한은 환율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1997년 이후 나진·선봉경제지대에서의 환율을 달러 당 2.15원에서 200원으로 현실화하였기 때문에, 지역간의 환율차이 극복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만간 환율을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개혁조치 실시배경

북한이 경제개혁조치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고,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회복하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가격 현실화를 통하여 경제계획과 실적을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계획경제의 실리를 도모하고, 쌀 수매 가격 인상과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농민들의 증산과 생산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북한에서의 ‘실리’란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개별 기업의 이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민의 수요를 보장하는 국가적·사회적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은 국가계획에 반영된 제품을 모두 생산한 다음에 비로소 추가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기업 이윤으로 축적할 수 있다.

둘째,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커진 지하경제를 정상적인 국가경제로 흡수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질서로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 사회주의의 병폐인 평균주의를 시정하고 ‘일한 것만큼 분배를 받는다’라는 새로운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및 자연재해 등으로 재정 수입이 계속 감소되는 상황하에서는 새로운 경제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지난 1987~1993년 동안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주요 지표들이 목표에 미달됨에 따라 완충기 경제계획(1994~1996)을 추진한 바 있다. 북한은 완충기가 종료되는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경제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북한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국가주도의 경제계획을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사회보장정책을 축소하는 것을 통하여 재정을 건전화할 필요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3. 경제개혁조치의 기본방향

북한이 최근 실시한 경제개혁조치를 시장주의경제의 도입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북한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최근 이른바 ‘사회주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해 나가는 길이며, 경제실리를 가장 잘 보장하는 길’이라는 지

시를 내린 것으로 볼 때(로동신문 2001.10.22자 보도), 북한의 특성상 이 지시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논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재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경제개혁조치는 이른바 ‘생산수단의 전 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테두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이 가격을 조절하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조선신보 2002.7.26자 보도).

따라서, 북한이 실시한 경제개혁조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 자본주의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번의 경제개혁조치는 향후 북한을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경제개혁조치의 성공조건

북한이 경제개혁조치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여 식량 등을 지원 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경제제재 해제조치를 이끌어 내어 수출을 증가시키고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청구권형태의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물품 부족현상으로 인해 지하경제가 더욱 확산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의 심화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북한 당국을 곤경에 처하게 할 것이다. 이번의 경제개혁조치가 실패할 경우 북한 당국은 경제개혁조치를 실시하기 이전 보다 더욱 나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경제개혁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미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한, 북한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남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

한이 제의한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남북 당국간 회담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북한이 경제개혁조치의 후속조치로 환율을 현실화할 경우, 북한의 대남 교역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위탁가공교역을 비롯한 남북교역이 활성화될 전망이며, 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에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趙 泳 照】